

# OPINION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 데스크 칼럼

### 장승기

정치부 부국장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도심은 온통 '파란 물결'이다. 이른 아침 출근부터 퇴근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이나 휴일, 도심 어는 곳을 가더라도 파란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 달성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하면서다.

민주당 광주시·전남도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선대위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역 득표율 목표를 '90% 이상'으로 설정했다. 투표율 목표도 지난 20대 대선보다 5%p 높은 85%로 제시했다.

여기에 지자체도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동참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과 교육감 등은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인 92.5%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들 단체장은 지난 12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 92.5%를 향해 함께 달려가겠다"며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투표율인 92.4%보다 높은 투표율을 목표로 세웠다.

이처럼 민주당 일선인 지역 정치권이 '투표·득표율 독려' 행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물론 정치인이나 단체장 개

## 미워도 다시 한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한 '치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호남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확고한 결집으로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갈수록 약해지고 존재감마저 미약해지고 있는 호남의 정치적 위상과 지역 경제의 수준을 뒷받침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 대선 득표율이 역대 대선처럼 90%를 넘을 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15대와 16대 대선에서는 김대중·노무현 후보가 90%가 넘는 득표율 받았고, 18대 문재인 후보도 90% (광주 91.97%, 전남 89.28%)의 표를 얻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호남 출대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권 연장에 실패한 데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 등에 지역민의 실망감은 컸다.

또 민주당은 호남 내 일당독점의 기득권을 누리며,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 속에서 원칙없는 폄소정치와 구태도 버젓이 보여 왔다. 여기에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큰 실망감은 오랜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역대 대선 투표처럼 투표 및 득표율을 압도적으로 올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후보는 영남에 해수부를 이전시키고, 충청에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

해 세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공헌했다.

하지만 호남지역 공약은 기존 사업 계획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전공대 설립과 같은 호남인의 표심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지역의 최대 과제인 광주 공공항 이진, 인공 지능(AI) 중심도시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에서는 광주에 AI(인공지능)총괄 국가기관인 인공지능청 신설, 서남권 메가시티 건설, RE100 전용 에너지자립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이끌 매머드급 공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남북권 메가공동체 조성 등 국토개발형 설립, 기후에너지부처 신설, 호남 인사 중용 등의 공약도 바라고 있다.

최근 광주 한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한 말이 귀에 맴돈다. "이번 대선이 치열한 접전 구도는 아니지만, 우리 호남이 이번 선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투표이다"면서 "표표를 해줘야 우리도 무언가 요구하고 바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공짜가 없다'는 거다.

어찌됐든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이다. 이번 선거에 압도적인 투표 참여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서 또 다시 기다려 보자. 이번에도 '찬밥', '별방'이 된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 기고

### 류명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캠퍼스 스마트전자자동차 교수



##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가이드

가 침수될 경우에도 내부에서 부식이 진행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바닷물에 노출된 배터리는 내부 단락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조사, 충전소 운영자, 정부 기관 등이 협력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배터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제조사가 제공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배터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배터리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충전 습관도 중요한 예방 요소 중 하나다. 차량 제조사가 권장하는 정품 충전기와 케이블을 사용하고, 충전 중 차량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충전 중 과도한 열이 발생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충전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실내 주차장에서 장시간 충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가 과열될 경우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를 운행하고 보관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배터리는 극단적인 온도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차량이 충돌 사고를 겪은 후에는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반드시 배터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침수된 차량은 절대로 자체적으로 시동을 걸거나 충전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꽃이 보이면 즉시 차량에서 대피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전기차 화재

는 급격히 확산 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화재를 진압할 때는 전도성이 없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신고한 후에는 전문기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화재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다량의 물을 사용해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냉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화재 발생 시 직접 진압을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품질 및 내구성 테스트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충전소 운영자는 충전기와 전력 공급 장치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충전소 내에 화재 진압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또한 소방당국과 응급 구조 기관은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장비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배터리 화재라는 새로운 안전 과제가 존재한다. 차량 소유자는 배터리 관리와 충전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와 제조사는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며,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는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 사설

### '5·18정신'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야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5·18유공자, 유족과 각 대선 후보,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권위 중 치러진 것은 역대 최초다. 특히 6·3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불참했다.

이 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피 끓는 오월 영령들의 외침과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는 공동체 정신이 하나 돼 오월의 정신이 되었다. 그 오월의 정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다.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은 이 대행과 대선 주자들, 소북 차림의 오월 어머니 등 참석자 모두 손 맞잡고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기념식 최대 화두는 '5·18정신의 헌법수복'이다. 1987년 개헌논의 당시 처음 거론된 이후 38년간 정치적 논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5·18 헌법 수복은 그동안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개헌 논쟁 등이 얽혀 공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헌법 수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했고 김문수 후보도 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준석 후보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5·18 기념식은 전례 없는 '대통령 대대대행'의 참사로 무게감이 떨어졌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들 일제히 오월정신의 헌법 수록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의미 있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광주 자치구 투표율 제고 캠페인 결실 맺길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 자치구들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이색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먼저 광주 동구는 지역 자생단체와 유관기관, 동구 SNS 서포터즈,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투표 참여 홍보 활동에 나서서 한면 톡톡 튀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유교, 간선도로 등 주요 거점 30개소에 게시하고 LED 전광판 홍보, 주요 행사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과 SNS 릴레이 투표 독려 챌린지 등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서구는 행정전화 안내 멘트에 '투표 참여 독려' 등의 내용을 추가했고 또 청사 내·외부 전광판과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게시대, 옥외 홍보 게시판, 구 대표 홈페이지와 SNS에도 '투표 참여'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남구도 청사 앞 미디어월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월동 빅스모 뒤편 푸른길공영권 산책로를 비롯해 3곳에 투표 참여 포토존을 설치하고 투표일에는 교통 불행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차량도 제공하기로 했다. 광산구도 투표 독려 내용 현수막을 각 동에 게시하고, 첫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기로 했다.

북구는 아예 문인 구청장이 투표율 제고에 직접 뛰어 들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투표율 1위를 기록하면 물놀이장 개장식에서 물풍선 맞기, 북구민의 날 음악회에서 노래 부르기, 만남의 날 '부끄부끄' 인형탈 착용, 하차때 열음개기 퍼포먼스 등 4가지 중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자치구들이 앞다투어 투표율 제고에 나선 것은 이번 대선에 광주 역대 최고 투표율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주는 그동안 직선제가 시작된 13대(노태우) 92.4%, 14대(김영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윤석열) 81.5% 등 17대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 가장 높았던 13대 대선때보다 0.1% 높은 92.5% 투표율을 목표로 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색 캠페인이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취재수첩

### 헌법이 품어야 할 오월의 목소리

### 이현규

정치부 부장대우



45년 전, 5월 18일. 광주는 어둠 속에서 빛을 지켰다. 총과 진압봉 앞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은 두려움보다 연대와 정의를 택했고, 죽음보다 자유를 선택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단지 한 지역의 항거가 아니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

고자 했던, 시민 모두의 고귀한 저항이었다. '오월 정신'은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불의에 맞서며, 자유와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실천의 역사다.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자는 요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헌법은 한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의 가장 높은 선언이다. 그렇기에 오월 정신을 헌법에 담는 일은, 단순한 명예 회복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을 세우는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 45년째인 올해,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최근 국민의힘까지 '오월 정

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보수 진영이 오랜 침묵을 깨고 책임을 공유하겠다고 한 점은 분명 진전이다. 하지만 약속은 말보다 실행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상, 외면당해온 유족들의 고통, 그리고 왜곡과 폄해를 시달려온 5·18의 역사 앞에서 정치권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그날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헌법으로 천명해야 한다.

오월의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문헌 진실이 있고, 여전히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날의 희생이 정의였음을, 그날의 선택이 역사의 옳은 길이었음을 헌법 속 문장 하나로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지 않을까. 오월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b>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진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법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